



주간 통일정세

2013-3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인민보안부장서 해임된 北 주상성, TV에 등장 눈길(7/2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지난 2011년 3월 전격 해임된 주상성 전 북한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이 2년 4개월 만에 북한TV에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오후 8시 보도에서 '7·27'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에 올라온 전쟁 노병 대표들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았다며 관련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 영상에서 주상성의 모습이 포착됨.

- **北 김정은, 6·25 중공군 전사자 묘지 참배(7/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이틀 뒤인 29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과 '성흥혁명사적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제1위원장은 "중국 당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직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준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모범"이라며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역사를 잘 알고 귀중히 여기며 길이 빛내나갈 수 있도록 사적지에 대한 참관과 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조직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전승절' 참가 노병·해외동포와 기념사진(7/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기념행사에 참가한 6·25전쟁 참전 노병, 해외동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이 촬영장에 나타나자 노병 대표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으며 사진 촬영이 끝나고 김 제1위원장은 노병들이 건강을 지켜 '1950년대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혁명 위업을 계승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함.

- **北 김정은, 동아시아컵 우승 여자축구팀 만나 격려(8/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아컵)에서 우승한 여자 축구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여자 축구선수들이) 전승절에 우승함으로써 승리의



7·27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었다"고 밝힌.

● **北 "전승절 행사 성공" 자평...강성국가 건설 독려(8/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국가 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며 모든 전선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전승절 이후 매진해야 할 과제로 ▲전 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化)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선군정치 노선의 주력인 인민군과 국방력 강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마식령 속도' 창조 ▲당 간부와 조직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함.

● **北, 수해 복구 본격화...대책기구 설치(8/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북한에서 수해대책기구인 '중앙큰물피해방지 연합지휘부'가 설치됐으며 그 산하에는 도, 시, 군별 연합지휘부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함.
- 신문은 내각과 산하 부처인 성(省), 중앙기관들에는 '큰물피해방지 상무분과'가 조직됐으며 이들 조직의 책임자로는 내각의 각 상(相·장관)들과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임명돼 대책기구는 통보 체계를 갖추고 수해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열병식 참가 전쟁노병들과 기념사진(8/3,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던 전쟁노병·지휘관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환호하는 전쟁노병·지휘관들에게 '따뜻한 인사'로 답례 하면서 "선군조선의 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쟁노병들, 지휘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사진 촬영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문경덕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이 함께함.

● **北 김정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8/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60주년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이날 공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문경덕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함께함.



■ **김정은동향**

- 7/30, 김정은 黨 제1비서, 7.29 평남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열사원을 찾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모택동 아들 모안영 등) 추모(7.30,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원홍, 김양건, 최부일, 리영길, 김경옥, 김영철,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김계관 동행
- 7/30, 김정은 黨 제1비서, 7.29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가 위치한 '성흥혁명사적지' 방문(7.30,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원홍, 김양건, 최부일, 리영길, 김경옥, 김영철,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김계관 동행
- 7/30,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절」 60돌 경축행사 참가한 전쟁노병 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7.30,중방·중통)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최부일, 리병삼, 주규창 등 참가
- 8/1, 김정은 黨 제1비서, 4.25팀과 햇불팀의 남자축구경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양궁경기 관람(8.1,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강석주, 리영수, 리영길,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김영훈, 마원춘, 김영철, 오금철, 리종무(체육상), 리주봉(체육성 黨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동행 관람
- 8/1, 김정은 黨 제1비서, 2013년 동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대회 참가(1위) 선수들 접견 및 선물 전달(8.1,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등, 남자축구경기 등 관람時 수행 간부 同 - 배석
- 8/3,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절」 60돌 경축 열병식 참가 전쟁노병들·지위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8.3,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리영길, 문경덕, 오일정 참가
- 8/3, 김정은 黨 제1비서, 8.3 故 정몽헌(前 현대그룹 회장) 사망('03.8.4) 10년 관련 원동연(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통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8.3, 訪北)에게 "추모 구두친서" 전달(8.4,중통·중·평방)
 - 정몽헌 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성업을 위해 큰일을 하였으며,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람.
 - 정몽헌 사망 10년 추모식, 8.3 금강산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관계자와 北 원동연·황호영(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장) 등 참가下 진행(8.4,중통·중·평방)



- 8/4,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전승" 60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관람(8.4, 중통 · 중 · 평방)
- 최룡해, 김격식, 장정남, 리영길, 문경덕, 오일정, 김경옥, 김영철 등 동행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北-中 두 나라 노병들의 친선연환무대, 7.29 김영남·최영림(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김영일 등 참가下 인민극장에서 진행(7.29, 중통)
- 김일성 父子 평안북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7.30 리만건(평안북도黨 책임비서/기념보고) 참가下 진행(7.31, 중방)

나. 경제

- 北, 나노기술 발전에 박차... '나노기술센터' 건립(8/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나노기술발전의 밝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제10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나노기술중심을 새로 나오도록 하시고 나노기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보급일반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고 밝히고 기초공업, 환경, 의학, 에너지, 경공업, 농업 분야에서 나노기술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농업용 나노살균제와 나노생물성장촉진제, 나노실내공기정화기 등의 제품을 소개함.
- 北 대규모 축산기지 '세포등판' 개간 마무리 단계(8/4,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지난해 말 강원도 일대에 조성하기 시작한 대규모 축산단지 '세포등판' 개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일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공화국 창건 65돌을 세포등판 건설 성과로 빛내일 신심에 넘쳐 총공세를 벌여나가고 있다"고 전함.
 - 이로 미뤄 북한이 정권 수립 65주년인 내달 9일까지 세포 · 평강 · 이천군에 걸친 평평한 황무지 세포등판에 목초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임.

- 기타 (대내 경제)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 성천군內(읍협동농장 등) 영농실태 현지 요해(7.31, 중통 · 중방)



다. 군사

- **北군수담당 비서 박도춘 3개월째 '잠적'...배경 관심(8/4, 연합뉴스)**
 - 북한 군수공업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3개월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박도춘은 지난 5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과 함께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한 이후 현재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활동이 보도되지 않았으며 '전승'(정전협정체결·7월 27일) 60주년 기념행사에도 불참함.
- **북한군, 하계훈련 최소화 호우피해 복구 명령(8/4, 연합뉴스)**
 - 7월 중순 이후 북한 내륙지방에 집중된 호우 피해가 북한군의 하계 군사 훈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최근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의 부대에 하계훈련을 최소화하고 대민 피해복구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상당수 부대가 훈련을 중지하고 피해 복구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전승절' 다음날도 경축 무도회·음악회 잇달아(7/29, 조선중앙통신)**
 -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는 29일 저녁 전승절을 경축하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당·정·군 인사들과 6·25전쟁 노병 대표들, 북한을 방문한 해외동포 및 외국 대표단 등이 관람하는 가운데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北 동아시안컵 우승 여자축구팀 '금의환향'(7/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우리의 미더운 여자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로 귀국했다"며 대회 일정을 마친 선수단의 귀환 소식을 신속히 전하고 선수단이 열렬한 환영 속에 비행장에 들어서려는 장면과 우승 소감을 밝히는 선수들, 북한의 우승에 감격스러워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도함.
- **北, 남녀평등법 공포 67주년 맞아 여성 역할 강조(7/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67주년을 맞아 '강성국가 건설에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며 애국적 헌신성을 강조함.
 - 신문은 특히 "여성들은 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반대배격하고 가장 문명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 식의 몸차림과 머리단장으로 거리와 마을들을 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국제축구학교, 유럽 감독 초빙...축구선진화 박차(8/1, 연합뉴스; 조국)**
 - 평양국제축구학교의 현철윤(53) 교장은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7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축구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현재 독일과 스페인의 우수한 축구감독들이 학교에 초빙된 상태"라고 밝힘.
- **유엔 "북한 폭우로 33명 사망"(8/3, 미국의 소리(VOA))**
 - 유엔은 최근 북한에서 집중호우로 33명이 숨지고 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지난달 24일 현재 북한 내 홍수 발생지역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피델카스트로 "쿠바무기 北선박 사건 조작되고 있다"(7/29, 연합뉴스)**
 -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파나마 운하에서 북한 선박에 실린 쿠바 무기가 압수당한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카스트로는 쿠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해 언급하면서 적대국들이 북한 선박이 억류된 사건을 기회로 쿠바를 중상하려 획책한다고 지적함.
- **북한, 홍콩 기업에 금강산·평양공항 리모델링 맡겨(7/29,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 홍콩 PLT설계건축회사의 도시계획자인 오토 청(奧煥謙)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사가 제안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공항 재설계 안에 깊은 인상을 받은 덕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공항 재설계 의뢰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함.
 - 청 씨는 "김 제1위원장이 우리 설계에 만족했지만 그는 수도(평양)의 공항이 경제특구의 공항보다 나빠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평양 공항의 업그레이드에 초청받은 이유"라고 말함.
- **방북 데이노키 의원,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7/29, NHK)**
 - 북한의 60주년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다고 NHK가 29일 북한 매체를 인용해 보도함.

● **중국 대북 수출액 4년 만에 감소(7/29, 교도통신)**

- 중국 해관총서가 2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어든 15억9천만 달러(약 1조7천700억 원)였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특히 대북 원유 수출액이 20.2% 감소한 2억6천만 달러를 기록, 주된 감소 요인으로 꼽혔으며 원유 수출량은 14.2% 줄어든 25만t으로 집계됨.

● **일본, 베트남에 남북 피해자 문제해결 지원 요청(7/29, 교도통신)**

- 베트남을 방문 중인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이 29일 전 다 이 꾸앙 베트남公安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정부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후루야 담당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 피랍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북 원조나 제재 해제를 제안할 의사가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대해 팡 장관은 북한 고위관리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코언 美차관 방한... "파나마 사건, 北 위협 입증"(7/29, 연합뉴스)**

- 29일 밤늦게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한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파나마(에서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적발된) 사건은 재래식 무기와 확산에 있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코언 차관은 "방한 목적은 한미 양국 모두 직면한 중요한 안보 사안인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매우 이 사안들에 대해 협력해 왔고 내일도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서 북한 인권 전담단체 출범(7/30,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특화된 '북한 캠페인 영국'(North Korea Campaign UK)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6·25전쟁 정전 60주년인 지난 27일 영국 런던에서 출범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영국 의회 소속인 잭 핸즈 연구원을 비롯한 20~30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축이 됐으며, 단체의 성격에 대해 핸즈 연구원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역량이 중동 국가 등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달리 '북한 캠페인 영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RFA에 밝힘.



- **중국, 압록강서 홍수로 고립된 북한 섬주민 구조(7/30, 광명망)**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 린장(江)시의 국경수비대가 최근 폭우로 섬에 고립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했다고 중국 광명망(光明網)이 30일 전함.
- **'대북 저승사자' 코언 美차관 "김정은 자금이 관심"(7/30, 연합뉴스)**
 - 방한중인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30일 "김씨 일가의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소위 통치자금에 관심을 두고 추적 중에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코언 차관은 "어디에 (김씨 일가의 자금이) 있는지 관심이 있지만, 행동을 취할지 취하지 않을지 여부와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일단 찾아낼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 **주북 中대사 "피로땀은 북중친선, 대 이어 계승"(7/30, 조선중앙TV)**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29일 평양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기념 양국 노병들의 친선연환 모임에서 "피로써 땀어진 귀중한 조중(북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영원한 공동의 재부"라며 전통적인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계승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함.
 - 류 대사는 또한 "우리는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며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강화하면서 호혜 공영의 원칙에 따라 두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美 여행사, 北 민수대창작사 탐방 상품 판매(7/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뉴저지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여행사가 지난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민수대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 백두산건축대학 등을 방문해 작가 및 대학생을 만날 수 있는 여행 참가자 15명을 이달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국내 조사활동 시작(7/31, 연합뉴스)**
 -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31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실무자 2명이 29일 입국해 어제부터 우리 단체 사무실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함.
 - 이들 조사관은 내달 7일까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8일부터는 국내의 다른 북한인권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이어가게 되며 이들 조사위원들은 ▲식량권 위반 ▲정치범수용소 관련 위반 ▲고



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의 자유 유린 ▲생존권에 대한 위반 ▲이동의 자유 침해 ▲납북자 등 강제실종 관련 위반 등 북한 당국이 자행한 9가지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 국제적십자 "北 홍수로 식량안보 장기적 악영향 예상"(8/1, 연합뉴스)
 - 최근 북한지역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해 북한의 식량안보에 장기적인 차원의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1일 IFRC가 최근 발행한 북한 홍수 피해 소식지(Information bulletin)에 따르면 연이은 폭우로 지난달 12~22일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농경지 1만3천340ha(133.4 km²)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되는 등 피해를 보는 등 홍수가 식량안보와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장기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北주도 국제태권도연맹, 2015년 세계대회 평양 개최(8/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함.
 - ITF 오스트리아사무국은 지난달 17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ITF 제23차 총회에 참석한 71개 나라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제19차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평양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 북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서명...비준은 아직 안해(8/1,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일 유엔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함.
- 국제적십자 "北 수해 지원 특별예산 32만달러 책정"(8/2,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32만 달러(약 3억6천만 원)의 특별예산을 책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일 전함.
 - IFRC는 수해를 입은 5천 가구의 주민 2만 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30만 스위스프랑(약 32만 달러)을 배정했으며 홍수 피해가 가장 큰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수재민 5천 가구를 대상으로 12만 달러분의 임시저처 제공사업, 4만700달러 예산의 식수 제공 및 위생사업을 진행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취사도구와 필수품을 제공할 계획임.



- **中, 북중 국경 두만강 하류까지 철조망 설치(8/2, 자유아시아방송(RFA); 아시아프레스)**

 - 중국이 북-중 국경 두만강의 하류지역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2일 밝힘.

- **北매체 "中, 北주민 구조는 친선의 증거" 선전(8/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3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吉林)성 린장(江)시의 변방 대대가 지난달 25일 사경에 처했던 북한 자강도 중강군 상장협동농장 농장원 3명을 구조한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중국 국경수비대의 헌신에 찬사를 쏟아냄.
 - 중앙통신은 "중국 국경수비대 구조원들은 세찬 물결과 바람으로 섬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여러 시간 악전고투해 섬에 있는 농장원들을 찾아냈다"며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장원들을 구원했다"라고 묘사함.
 - 중앙방송은 특히 이번 구조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에 즈음해 "조·중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친선의 열의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함.

- **북-러 수산대표단 양식장 교차 방문(8/3,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의 어업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 대표단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수산청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러시아 수산청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영 수산업체 '프리모리보드'사(社)의 수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달 방북해 강원도 원산시의 연어 부화장, 함경남도 북청군의 송어 양식장, 평양 메기공장 등을 둘러봤다고 밝힘.

- **北, 美 공대공 미사일 南 판매 움직임 비난(8/4, 노동신문)**

 - 북한은 4일 미국이 남한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추진하는 데 대해 남한의 북침 야망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 움직임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남조선 호전광들을 반공화국 대결로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함.

- **北 김영남, 이란서 로하니 대통령 만나(8/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신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로하니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인사를 전했으며, 로하니 대통령은 30년 전 김일성 주석을 만난 사실을 회고하고 양국의 친선관계가 확대발전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노동당↔쿠바공산당 대표단 사이의 회담, 7.29 김영일(黨비서) 등 참가下 진행(7.29, 중통·중방)
- 日 방위성의 이지스함 2척 추가(총 8척) 구입 검토 등 '미사일방위 능력 강화' 관련 '日 자위대를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고 해외침략군으로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7.30, 평방)
- 北 김영남(8.4,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8.1 평양 출발), 8.3 이란 수도 테헤란 도착(8.3, 중통·중·평방)
 - 黨 및 정부대표단(단장 : 김기남 비서)도 8.2 적도기니 수도 말라보 도착(8.3,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뉴질랜드 키 총리 "북한 핵무기 포기해야"(7/29, 연합뉴스)

-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29일 주한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확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북핵 6자회담 일본대표 4일 방중(8/2, 교도통신)

- 북핵 6자회담의 일본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과 북핵문제를 논의한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함.
- 이하라 대표는 오는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6자회담의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다른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임.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8월 한미군사훈련 하면 한반도 또 전쟁국면"(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미국의 패권야망을 분쇄해버려야 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 달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또다시 벌어지고 여기에 유엔군 사령부가 개입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위협함.
- 신문은 지난봄 한반도 긴장상태가 최대로 격화된 데는 유엔군 사령부라



는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며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절대로 완화할 수 없고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北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북침야망 실현 기도" 비난(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자주권 실현을 외면하는 비굴한 처사'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있지도 않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전작권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환심을 얻어 국제적인 반공화국 압박공세를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세계적으로 군대의 지휘권과 같은 초보적인 주권마저 외세의 수중에 내맡기고 그것을 돌려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남조선 당국자들뿐"이라고 비난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정몽헌은 애국인사"...10주기 맞아 추모(8/3,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방북한 정 전 회장을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인사"로 평가하며 추모함.
 - 신문은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절세위인의 동포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 전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연을 소개하며 그가 "정주영 명예회장과 함께 북남경제협력의 새 장을 펼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함.
 - 또한 정 전 회장이 '애국적 기업가'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김 국방위원장의 '은정'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남북을 잇는 '무지개 다리'로 만들기 위해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함.
- **개성공단 폐쇄 위기속 김정은 구두친서(종합)(8/3, 연합뉴스)**
 - 개성공단 완전폐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했다가 오후에 돌아온 현 회장은 "추모식에 참석한 북측의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몽헌 전 회장을 추모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구두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힘.
 - 또한 "사업과 관련한 북측의 언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추모사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어서 사업이야기는 없었다"면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서도 북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함.
- **北매체, '김정은 구두친서' 보도(8/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



서를 보낸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4일 새벽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3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0주기를 맞아 정 전 회장을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함.

● 정부 "인내심 한계"...개성공단 '중대조치' 고비(종합2보)(8/4, 연합뉴스)

- 정부는 4일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일주일째 계속되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우리측 회담 제의 수용을 압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형식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南北민족종교단체들 공동호소문] 가쓰라-태프트 밀약 108돌 관련 '남북이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방안 모색, 일본의 간교한 만행과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것'이라며 美日 비난 및 '평화통일 성취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7.29,중통·평방)
- 우리 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등 구속(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反통일 망동'이라고 비난(7.30,중통·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연기 계획(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논의 등)에 대해 "친미사대 매국행위의 극치, 북침야망 실현 기도"라고 지속 비난 공세(7.31,중통·노동신문·평방)
- 내달 '한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時 "유엔군사령부 개입" 등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유지 등 대외정책' 비난(7.31,중방·노동신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 대북제재 긴밀공조 다짐...中과 협력도 더 강화>(7/30, 연합뉴스)
 -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과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간의 입장차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음.
 -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만나 대북·대이란 제재 문제를 논의했음. 코언 차관은 이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영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났음.
 - 한미 양국은 이날 접촉에서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당국의 적발 사례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평가했음.
 - 양국은 또 긴밀한 대북제재 공조를 지속키로 했으며 중국과의 협력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등과 관련된 중국의 노력을 평가했음.
 - 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의 전반적 현황과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코언 차관은 조 본부장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단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발표할 준비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음.
 - 앞서 코언 차관은 지난 3월 한·중·일 3국을 방문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요청, 사실상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는 성과를 끌어낸 바 있음.
 - 코언 차관은 이날 오후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거래제한 품목·규모 등을 강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대이란 제재 문제도 협의했음.
 - 우리 정부는 대이란 제재 강화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미측에 요청했음.
 - 일본을 거쳐 방한한 코언 차관은 이날 밤 출국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연이어 방문,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 강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재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임.
 - 한 제재 전문가는 "항구, 수출, 금융 통제 등이 잘 안 되는 동남아 지역



은 북한 및 이란 제재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구멍"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북한 군 관계자 "곧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할 것">(8/1, 미국의소리)
 -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곧 장거리 로켓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북한 인민군 관계자가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한 VOA 스티브 허먼 기자에게 북한의 은하 로켓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던 중, 추가 로켓 발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허먼 기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토머스 허드너 예비역 해군 중령의 전우 유해 발굴 작업을 북한에서 밀착 취재하면서 인민군 관계자들과 접촉했음.
 - 허먼 기사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전시회에서는 은하-9호 로켓 모형까지 있었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추가 로켓 발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 북한은 지난 해 12월 국제사회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바 있음.
 -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기존의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나. 미·북 관계

- <"카터 방북 물밑조율 중...당장 방북할지는 모르겠다">(7/29, 연합뉴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고 북한 측과 물밑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과거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했던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최근 서울을 거쳐 평양을 방문해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8일(현지시간) "카터 전대통령이 방북을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 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장 방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이는 개인자격의 방문으로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케네스 배씨의 석방문제를 협상하는 의미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보임.
 - 이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9개월째 북한에 억류돼있는 케네스 배씨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카터의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다른 문제보다는 케네스 배씨의 석방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카터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교착된 북미관계에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게 워싱턴 외교



가의 지배적인 시각임.

-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전직 국가원수 모임인 '엘더스' 회원들과 함께 워싱턴DC을 방문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카터 전대통령은 지난 2011년 4월 엘더스 인사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실패했음.
-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김정은, 예측 불가능">(7/30, 자유아시아방송)
-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예측 불가능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우려한다고 말했음.
 - 이 같은 그의 답변은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이 호전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일삼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획득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 정책으로만 막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음.
 -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앞서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미국의 주요 우려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점, 또 그가 북한 내 군부 강경 세력의 신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그의 오판(miscalculation)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군부 통솔력과 국내 정치 경험 분야에서 격차를 보인다고 답했음.
 - 그러면서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어리고 미숙하며 또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의지(intentions)와 행동, 또 반응 등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지적했음.
 - 하지만 그는 북한 정권의 이해관계는 김정은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단기간에 변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어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태평양에 전개된 미국 항공모함의 수가 줄어들 경우 미국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한편,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당국의 비이성적인 핵무기 개발을 비판했음.
 - 이는 경제 번영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안녕(well-being)'은 이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또 국제사회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지적임.



- <미국 민간 구호단체들, 대북 수해 지원 협의 중>(7/31, 미국의소리)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머시 코어가 대북 수해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머시 코어의 조이 포텔라 대변인은 29일 VOA에 "북한의 수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비정부기구들과도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포텔라 대변인은 아직은 북한에 보낼 구호물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머시 코어와 사마리탄스 퍼스, 월드 비전,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은 지난 몇 년간 공동으로 북한 수재에 대응해왔음.
 - 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2010년에는 75만 달러, 2011년에는 90만 달러를 지원 받아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냈음.
 - 지난 해의 경우 공동 대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개별적으로 구호물품을 보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29일 홈페이지에 북한의 수재 상황을 알리며 구호물품 전달을 위한 모금활동에 나섰다.
 - 이 단체는 수 년간 결핵 지원 활동을 펼쳐온 황해도에 식량, 정수기, 의약품을 보낼 예정임.
 - 한편, 아메리케어스는 북한 내 홍수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부터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해 온 아메리케어스는 지난해에는 7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북한 수재민들에 보낸 바 있음.

- <“美 B52 6대 이상 괌에 상시배치…北핵공격 대처”>(8/1, 연합뉴스)
 - 미군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처하고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서태평양의 괌 기지에 B52 전략폭격기를 6대 이상 지속적으로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음.
 -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의 제임스 코왈스키 사령관(중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방산협회(NDIA) 주최로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한국 국민과 아시아 지역 우방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 코왈스키 사령관은 이 작전계획을 '폭격기의 지속적 배치(Continuous Bomber Presence)' 프로그램이라 명명하고 "6개월마다 새로운 B52 폭격기를 교대로 괌 기지에 순환배치하고 있으며 최소한 6대 이상의 폭격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B52는 핵폭탄과 정밀유도탄 등을 운반하는 전략폭격기로, 서태평양의 전략요충지인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폭격훈련과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코왈스키 사령관은 또 유사시에는 B52 외에도 B2 스텔스 폭격기를 미국 본토에서 출격시켜 한반도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코왈스키 사령관은 그러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적 무기이자 대통령의 무기이며 적의 심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무기"라며 "핵무기를 실은 전략폭격기를 투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 <미군 한국전쟁 참전용사, 미국의 유해발굴 재개 촉구>(8/2, CNN)

- 한국전 참전용사인 허드너 대위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005년에 중단한 미군 유해발굴 공동 작업의 재개를 희망하는 북한의 바람을 전달했음.
- 약 8천여 명의 미군 참전용사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전쟁중 실종(MIA)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이유로 북한 지역에서의 유해발굴을 잠정 중단한 상태임.
- 허드너 대위는 그의 편지에서 북한군 장교들이 그에게 정치적 문제에 관계없이 그의 이러한 인도적인 임무가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군 관료들은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신뢰하게 된 군인이자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 허드너 대위와 그의 동료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북한을 여행하는 동안 그들을 호위했던 북한군 장교들의 존경과 호위의 수준에 대해 놀랐음.
- 허드너 대위는 또 "다른 국가의 참전 용사들과 함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신중함이 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말하려 하지 않고, 당신과 너무 가까워지길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마치 오래된 동료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 허드너대위는 그의 이번 여행이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바람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는 9월 북한의 재방문 요청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 북한군은 조신과 장진호에 선발대를 급파했지만 지난주 홍수로 인해 현재 고립된 상태임. 하지만, 북한군 관계자는 몇 달 뒤에는 도로와 헬리콥터 착륙장이 복구될 것이라 믿고 있음.
- 한편, 북한군은 합동 전쟁 포로·실종자 전사자 유해 감시 사령부의 대표가 허드너 대위의 동료인 제시 브라운의 유해를 찾기 위한 탐사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재관여 문제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다. 중·북 관계

● <北 김정은, 6·25 중공군 전사자 묘지 참배>(7/3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이틀 뒤인 29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장소 2곳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과시했음.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과 '성흥혁명사적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음.



-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은 6·25전쟁 당시 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한 중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임.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도 이곳에 묻혀 있음.
 - 김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직후인 2010년 10월 26일에도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북한과 중국의 국가(國歌)가 연주된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은 열사릉원에 회환을 진정하고 묵념했음. 그는 마오안잉의 묘를 찾아 따로 회환을 진정하고 묵념하기도 했음.
 - 김 제1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는 공동의 위업을 위해 함께 싸운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우의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견자(증인), 조중친선의 상징"이라며 "조중친선의 바탕을 굳건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제1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 사령부가 설치됐던 성흥혁명사적지도 방문했음.
 - 성흥혁명사적지는 김일성 주석이 전쟁 중인 1951년 10월 19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들렀으며 1953년 8월 27일에는 '역사적인 연설을 한 곳'이라고 중앙통신은 소개했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11년 중공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이곳을 방문했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곳에서 중공군이 사용한 반토굴집, 지하갱도, 침실, 군인회관 등을 둘러보고 사적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음.
 - 김 제1위원장은 "중국 당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직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준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모범"이라며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역사를 잘 알고 귀중히 여기며 같이 빛내나갈 수 있도록 사적지에 대한 참관과 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조직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 상반기 북-중 교역, 전년 대비 3.2% 감소>(7/31, 미국의소리)
- 올 상반기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중간 교역액은 29억 5천5백만 달러로 집계됐음.
 - 이 같은 수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해 상반기보다 3.2% 줄어든 것임.
 - 30일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출은 16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 감소했음.
 - 중국의 대북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이유는 대북 원유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임.
 - 상반기에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원유였지만, 금액은 2억6천 5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감소했음.



- 특히, 지난 2월에 이어 6월에도 원유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밖에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20t 이상 화물차와 밀가루, 콩기름, 섬유 순이었음.
-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루 차오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중국의 대북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꼽았음.
- 이와 관련해 차오 연구원은 "북-중 관계가 과거의 혈맹에서 정상적인 우호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관계가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광물자원이었음. 이 가운데 석탄이 7억 4천4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넘었고, 철광석이 1억2천5백만 달러로 뒤를 이었음.
- 이밖에 비합금선철과 납광석이 뒤를 잇는 등 광물자원이 대중 수출품 1위부터 4위를 차지했음. 올 상반기 한국과 중국 간 교역액은 1천3백22억 달러로 북-중 교역액의 44배를 넘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베트남에 납북자 문제 협력 요청>(7/30, 미국의소리)

-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베트남을 방문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음.
-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이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쯔 다 이 꾸앙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만났음.
- 이 자리에서 후루야 납치문제 담당상은 베트남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음. 후루야 담당상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북 지원을 재개하거나 대북 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음.
- 이에 대해 꾸앙 장관은 북한 고위 관리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음.
- 두 나라는 또 양국 경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차관급 협의를 시작하고 납북자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음.
- 후루야 담당상은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도 예방해 북한 문제를 논의했음. 후루야 담당상의 베트남 방문은 북한과 국교를 맺은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임.
- 특히,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일본 언론은 풀이했음.
- 일본 정부는 몽골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후루야 담당상은 지난 8일부터 4일간 몽골을 방문해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음.
-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몽골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후루야 담당상은 꾸앙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북한과 국교를 맺은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마. 기 타

● <뉴질랜드 키 총리 "북한 핵무기 포기해야">(7/29, 연합뉴스)

-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29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확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 키 총리는 이날 주한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그랜드 히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인은 물론 서울에 사는 외국인에게 불확실한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키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미는 노력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염원에 갈채를 보낸다"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높이 평가했다.
- 그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최대 현안인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
- 키 총리는 "한국이 기존 FTA 상대국과 맺은 특혜 무역 협정 때문에 뉴질랜드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과 뉴질랜드간 FTA 협상도 빨리 타결돼 양국이 각각 다른 국가와 맺은 교역 관계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그러면서 △중소기업 성장 촉진 △연구개발(R&D)에 혁신과 창조성 도모 △식량·자원 안보 난제 해결 등 잠재적 혜택을 언급하며 한-뉴질랜드 FTA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 그는 또 "수천 명의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사이의 춤사위를 따라하는 것을 보면 양국 관계에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양국 관계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키 총리는 앞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정홍원 국무총리 및 주요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했다.

● <파나마 北선박서 실탄 발견...유엔 제재 힘 얻나>(8/3, 연합뉴스)

- 파나마 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신고하던 북한 '청천강호'을 붙잡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처음 발견하면서 유엔(UN)의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파나마 검찰은 2일(현지시간)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한 결과 상지에서 유탄발사기용 실탄과 미확인된 다른 탄약들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확한 양과 유형을 확인하려면 전문가들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번에 실탄이 발견된 것은 기존에 북한에 수리를 의뢰하기 위해 구형



- 미그 전투기 부품 등을 선적했다는 쿠바 정부의 설명과는 어긋남.
- 화기용 실탄은 바로 전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쿠바와 북한이 원거리 무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임.
-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15일 파나마 운하로 진입하던 청천강호가 미신고 무기를 싣고 있을지 모른다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선박을 붙잡아 수색을 벌인바 있음.
- 이 과정에서 미그 21 전투기 2대(1950년대 구 소련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2개를 찾아냈고 7월 말에는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등을 추가로 발견했음.
- 파나마 정부는 지금까지 선박 내 화물 창고창 5개 중 2개에 대한 수색만을 완료한 탓에 향후 실탄을 넘어선 또 다른 군수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
- 영국 등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청천강호 사건이 드러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음.
- 쿠바는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구형 무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리를 가장한 사실상의 무기 거래라는 게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주장의 배경임.
- 하지만 이런 주장을 넘어 설령 유탄발사기용 실탄이 나온 것을 문제로 삼더라도 이것이 추가 제재로 이어질 근거가 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됨.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 이송할 수 없는 무기 대사에서 소형화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전작권 재연기 협의...통합국방협의회체 회의개최>(7/30,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30일 서울에서 제4차 통합국방협의회체(KIDD) 회의를 개최했음.
 - 양국은 이틀간 열릴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실시 등을 협의함.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점점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 상황을 주요 조건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께 합참이 주한미군 측을 통해 전작권 전환 상황 재검토 제의를 한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간 공식 대화"라며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상황 재검토 제의에 대한 미국측의 응답이 있



- 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 정신을 지난 60년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런 정신을 공유하면서 양국 현안을 발전적으로 협의하고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미국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우리는 한국전에서 싸운 용사들의 어깨 위에 서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에 개최되는 이번 KIDD 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KIDD 회의는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릴 제45차 SCM을 위한 실무협의 성격도 있음.
 - 국방부는 "이번에 협의한 결과는 SCM에서 최종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7/31, 연합뉴스)
-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민주당)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그는 특히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공식 임명되면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청문회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은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며 우리 정부 관리들이 이번 사안을 검토해나고 본인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 방법론 등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대북 군사태세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국 정부와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현재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한국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수요기반의 접근을 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또 주한미군 이전기지 문제에 대해 "주둔국 부담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며 "책임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비용분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8천8809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용산기지 이전 계획 비용은 일단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기지이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것이 가능한 대안인지 모르겠다"며 "기지이전은 오히려 우리 미군의 대북 대비태세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 <외교부 "방위비분담, 제도개혁·총액삭감 목표">(7/31, 연합뉴스)
- 외교부는 31일 2014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실질적인 제도개혁과 총액삭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외교통일위원회 합동 당정협의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조 의원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책정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췄는데 이번에는 총액기준으로 삭감해야 한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 또 총액기준으로 산정하는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귀 기울여달라고 했고, 정부에서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총액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위비분담금을 항목별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누적된 관행 중 시대에 맞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회의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7천612억 원의 불용액을 커뮤니티뱅크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한미 협상과정에서 그 문제도 다룰 것 같다"고 덧붙였음.
- <美 하원,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8/1,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7월 27일)을 맞아 미국 상원도 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찰스 랭글(민주·뉴욕) 의원 등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H.CON.RES.41)'을 구두 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음.
- 랭글 의원과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스),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4명의 하원의원이 전쟁 발발 63년째인 지난 6월 25일 발의한 결의안임.
-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및 정전 협정 체결 등 당시 상황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나열하고 미국 의회가 이 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음.
- 결의안은 북한에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이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 법을 지키고 핵확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랭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전은 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종종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려왔지만, 오늘 결의안이 통과되면 옛 전우들에게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이들과 이들의 업적에 감사하는 대열에 동참했음을 보여주게 된다"고 밝혔음.
-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도 결의안 지지 발언을 했음.
- 미국 상원도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같은 내용의 결의안(S.CON.RES.20)을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주중 처리할 것으로 전망
- 상원 결의안에는 발의 당일에만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음.
- 한 소식통은 "상·하원 공동 결의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 가운데 한쪽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 미국 의회 전체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FTA 2차 협상 중국 상하이서 개막>(7/30, 연합뉴스)
 - 한국·중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됐음.
 - 상하이 쑹장구 린인신로 르메리디앙서산호텔에서 내달 2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2차 협상에 한국 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관이 참석했음.
 - 중국 측은 위지안화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나카미네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왔음.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 지적 재산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회의가 잇따라 열림. 협상 방식과 상품양허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짐.
-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기본 원칙·지침 등 협상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됐음.
- 앞서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음. 3국 간 발전 격차, 민감 산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난항이 예상됨.
-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인구 15억2천200만 명, 명목 GDP(국내총생산) 14조3천억 달러의 시장이 탄생함.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 유럽연합(EU·17조5천억 달러)에 이은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임.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아소 발언, 많은 이에게 상처">(7/30, 연합뉴스)

- 정부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극적 언행을 강하게 비판했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소 부총리가 전날 한 강연에서 독일 나치식 개헌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한 데 대해 "이런 발언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난했음.
- 조 대변인은 "개헌 문제를 떠나 유럽의 과거 한 정권(나치 정권)에 대한 언급이 오늘의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피해를 본 주변국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명백하다"고 밝혔음.
- 그는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은) 주변국을 침략했던 가해자로서 겸허한 자세에 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 대변인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한일관계의 안정적·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일본 측으로부터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계기에 한일정상회담을 하자는 구체적인 제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 조 대변인은 이틀 전 서울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 한·일전 경기의 '정치적 응원' 논란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현장에서 양측 응원용품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협회가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음.

● <日 여론조사로 새 '독도 도발'...정부 엄중 항의 방침>(8/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까지 발표하는 새로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섰다. 이에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천명(1천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
 - 조사는 작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주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설치한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실시했음.
 - 이번 조사 결과는 방위백서 등 각종 정부 문헌과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관련 교육이 독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음.
 - 독도를 안다고 답한 사람에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표시하도록 했더니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현에 속한다'가 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내각부는 밝혔음.
 - 독도의 존재를 일본인 절대 다수가 인지한 것과 달리 비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응답은 61%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음.
 - 이번 조사에서는 또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이 71%에 이르렀음.
 - 역시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관심의 영역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꼽은 응답이 67.1%, '역사적 경위'가 53.9%,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대응'이 38.6%로 각각 나타났음.
 - 우파 성향인 아베 총리 2번째 임기의 사실상 첫해인 올해 들어 일본은 지난 2월22일 시마네현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에 중앙정부 당국자인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한 데 이어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 각각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해왔음.
 - 우리 정부는 여론조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 2일 외교부의 입장표명 등 형태로 일본에 엄중 항의키로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음.
 - 한편,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는 이날 독도가 표시된 에도시대(1760년대) 일본 지도 2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정부 "日 독도주장과 오만·그릇된 역사인식 개탄">(8/2, 연합뉴스)
-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자국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공식 항의했음.
 -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내각부 여론조사를 빙자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적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음.

-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시로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일본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한 언행과 그릇된 역사 인식을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음.
- 외교부는 "정부는 이러한 물역사적인 언행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 회합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 인식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대리는 이날 오전 후나코시 다케히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 같은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음.
-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정부당국이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1일 발표하며 새로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바 있음.

라. 미·중 관계

● <美, 중국포위전략 구체화...아태지역 전력배치 확장>(7/30, 연합뉴스)

- 미국이 대중국 포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환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미 공군 태평양 작전사령관인 허버트 '호크(Hawk)' 칼리슬 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공군이 올해 태국, 인도, 싱가포르, 호주에 전력을 순환 배치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존재감을 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중동지역의 전쟁 재발로 이른바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이 빈 구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최소한 미 공군이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변화는 실제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FP는 분석했음.
- 아시아 중시의 배경 개념은 단순함. 지난 냉전시대 서방국들이 소련을 봉쇄했듯이 중국을 미국과 동맹 세력으로 둘러싸는 것임.
-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동맹국들과 연합 작전 운용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칼리슬 대장은 "아태지역 우방 군대와와의 작전운용 호환성, 통합성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전략"이라며 "세계에서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곳은 아시아뿐"이라고 언급했음.
-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상설 주둔 미군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많이 건설하는 대신 이 지역의 기존 비행장들에 미국 본토와 북태평양 기지의 공군 전력을 계속 순환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 미 공군은 알래스카에서 하와이, 괌, 일본,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지역에 주력기지 9곳을 두고 있음. 이 기지들은 이미 기존 전력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배치 대상은 냉전시대 이후 미 공군이 배치되지 않았던 나라의 비행장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칼리슬 대장은 "최정예 공군기들이 태평양에서 남으로, 동으로 점차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행 F-22 랩터, F-35 전투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아시아 태평양에 우선 배치될 것임을 시사한 셈임.
 - 이미 미 해군은 연안 전투함이 싱가포르 기지를 활용하고 해병대는 호주 공군기지에 배치되는 등 아태지역에 대한 중시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 한편,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티니언 섬 등 태평양 제도의 비행장들도 재정비되고 있음. 미군 주력부대가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 상원 '동중국해 분쟁 평화 해결' 결의안 채택>(7/31,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동중국 및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결의안은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해상에서의 영토적·주권적·사법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미국이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제목의 결의안(S.RES.167)을 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가결처리했음.
 - 로버트 메넨테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초 발의한 것임.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공화당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음.
 - 결의안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해 또는 영토 주권을 주장하거나 현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로 이뤄지는 해군 및 어선,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 의한 각종 강압과 위협,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고 지적했음.
 - 또 모든 분쟁 당사자가 안정을 해치고 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결의안은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심화를 피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려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선박 항해 및 항공기 운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결의안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궁극적인 주권 문제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제했음.
- <中관영매체 "美의회, 자꾸 중국 건들지 말라">(8/3, 연합뉴스)
-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최근 미국 의회가 잇따라 통과시킨 중국 관련 법안들과 관련, 3일 "중국에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 미 의원들과 일본 정치인들이 배후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미국이 잇따라 중국을 건드리고 있고 미상



- 원은 다오위다오 문제에 손대기를 원한다'는 기사에서 "미국이 대만군에 (무기) 판매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본 총리에게 친필 편지를 받고 억지스럽게 중국을 지적하는 결의안을 '순조로운 통과'시키겠다 약속한 의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 미 상원은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분쟁 평화 해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지난 1일 '2013년 대만정책법안'을 채택했음.
 -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을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동중국해 분쟁 평화 해결' 결의안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2013년 대만정책법안'에 대해 "미국-대만 고위층의 상호방문에 대한 대우를 격상하고 다방면에서 방어 수요(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중국 내부사무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비난했음.
 - 중국 외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대변인 입장을 내고 '동중국해 분쟁 평화 해결' 결의안은 역사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지적"이라고 반박하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가 미국 측의 영유권 분쟁 개입 움직임 등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더는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음'을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마. 미·일 관계

● <“오바마 대통령, 내년 봄 일본 공식 방문”>(7/3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봄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 조정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3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국민 대우의 방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일을 전후해 한국, 중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닷케이는 전했다.
- 대중 정책, 북한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미일동맹을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요체로 규정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연대 강화를 확인할 예정임.
-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시기에 대해 "2014년 여름까지의 12개월 이내가 유력하며 내년 봄을 축으로 미 정부내 조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닷케이는 덧붙였다.
- 한편, 오는 10월 상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춘 일본 방문은 중국 방문도 포함해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음.



- <“미국, 한·일에 핵시설 공개…불안 해소 목적”>(7/31, 연합뉴스)
 - 미국이 비밀 핵시설까지 공개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동요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핵시설과 관련된 미군기지 3곳을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간부들에게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는 2010년 2월에 시작된 미·일 확대 역지력 회의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네브래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에서는 핵공격 목표를 정하는 전략군사령부 센터, 몬태나주의 맬름스트롬(Malmstrom) 공군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사령실, 워싱턴주 키셋(Kitsap) 해군기지에서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내부를 공개했지만 핵무기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음.
 -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면서도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하거나 핵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일은 없었음.
 -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에도 핵시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신문은 미국측 관계자가 "오바마 정권의 핵무기 감축 정책으로 동맹국이 동요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며 미국의 핵시설 공개에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로 핵무장으로 치닫는 걸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추측했음.
 -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자국의 핵전략에 끌어들이므로써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이나 적기지 선제공격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도 있다고 짚었음.

- <“美 군수차관 방일…”日 무기수출 금지 재검토”>(7/28, 연합뉴스)
 - 프랭크 캔달 미국 국방부 차관이 1일 일본을 방문,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과 만날 예정임.
 - 미 국방부의 획득, 기술 및 군수 담당 차관인 캔달 차관이 일본을 방문해 경제산업성, 외무성, 방위청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미군의 한 대변인이 전했다.
 - 캔달 차관의 일본 방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외무성, 방위청은 공동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이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와 판매 대상국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 50년가량 지속하여온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정책은 일본의 방위산업체를 고립시키고 일본의 방위산업을 소규모, 고비용 구조로 만들었음.
 - 캔달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산업 감독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캔달 차관은 그동안 일본의 방위산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을 만나기를 위해 왔으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무기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분쟁당사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금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新) 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공개한 중간보고는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장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을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가 표명한 정책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었음.
- 3원칙 자체가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일본의 역대 정권이 이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음.
-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2004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공동개발생산을, 올해 들어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이미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바. 미·러 관계

● <스노든, 중국·러시아에 기밀제공 가능성>(7/29, 연합뉴스)

-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 등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와 중국에 미국의 국가기밀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양대 사이버 침략국인 중국(정확하게는 홍콩)과 러시아로 향했다"면서 "그렇다면 그가 왜 두 나라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모든 (기밀) 자료를 가졌는지, 러시아가 가졌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스노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를 빼돌렸다"면서 "이후 중국과 러시아로 갔고, 전략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다른 시점에 폭로되도록 했다"며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다만 '스노든이 중국과 러시아에 기밀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또 러시아가 스노든의 신병 처리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스노든 사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이런 식으로 스노든에게 일종의 일시적 망명 지위를 준 것은 러시



아가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뭔지를 판단할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라면서 "그러나 스노든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로서도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특히,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는 KGB를 운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말했음.
- 이밖에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일각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음.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앉아서 스노든이 한 짓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

● <러시아 "美 매닝 일병 재판은 이중잣대" 비판>(7/31, 연합뉴스)

- 러시아가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중기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인권·민주주의·법치 담당 특사 콘스탄틴 돌고프는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 사건에서 인권 준수와 관련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는 "미국 정부가 매닝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이중기준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려면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음.
- 그러면서 "만일 (자신과 남에게) 이중기준이 적용되면 이는 다른 나라뿐 아니라 인권단체들로부터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러시아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미국이 정작 정부의 부당한 행동을 폭로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음.
- 이라크 주둔 당시 정보 분류업무를 맡았던 매닝 일병은 2010년 위키리크스에 약 70만 건의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간첩죄, 반역죄 등 20여 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음.
- 매닝 변호인단은 그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혹함과 미국 정부의 부당성을 고발하려는 의도에서 기밀을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돌고프는 미국이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정작 미국 정부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인권 준수 여부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고 가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돌고프는 또 미국의 여러 교정시설에서도 주기적으로 인권 유린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금도 그러한 부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말 서로 상대국을 겨냥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올 4월에는 이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각국이 인권 침해자로 판정한 상대국 인사 18명씩의 명단을 발표한 뒤 이들에게 입국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음.

- 미국은 2009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을, 러시아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지들에 대한 부당대우와 러시아인 인권 침해에 가담한 미국 인사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시켰음.

● <러시아, 미국 하원 對이란 제재 법안 채택 비판>(8/1,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하원의 대(對) 이란 추가 제재 법안 채택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겐나디 가틸로프 차관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를 몇 건이나 채택했다"며 "안보리 조치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목적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가틸로프 차관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과제 해결이 아니라 이란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난했음.
- 미국 하원은 지난달 31일 이란 핵무장 정책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H.R.850' 법안을 통과시켰음. 법안은 발효 후 1년 안에 이란의 하루 석유 수출량을 추가로 100만 배럴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음.
- 현재 이란산 원유 거래량이 하루 평균 100만 배럴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원유 전면 금수조치로 해석됨. 제재 법안은 상원 심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 한편, 일부에선 4일 하산 로하니 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이뤄진 미국 하원의 이란 제재 법안 채택이 개혁 성향 로하니 대통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스노우든 망명길 허락한 러시아, 미국 반응은?>(8/2, 월스트리트저널)

- 러시아가 1일(목) 미국 국가안보국(NSA) 기밀을 누설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에 대해 망명을 전격 허가함으로써 스노우든은 한 달 넘게 머물던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떠날 수 있게 됐음.
- 스노우든은 한동안 러시아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색된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어조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스노우든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기소된 범죄인"이라고 밝혔음.
- 카니 대변인은 또한 이번 결정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러 사법 공조체계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러시아가 스노우든의 망명을 허용함으로써 올해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려던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 시리아 내전 사태 등 주요 외교 현안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바 있음.

- 미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음. 카니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여러모로 정상회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음.
- 스노우등은 1년 '임시 망명'을 허가 받았으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스노우등은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여행할 수 있으며, 5년 연속으로 체류할 경우 귀화 신청도 할 수 있음.
- 스노우등을 대변하는 변호인인 아나톨리 쿠체레니는 세레메티예보 국제 공항에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스노우등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상태"라고 전했음.
- 한편,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교담당 보좌관은 이번 사건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푸틴 대통령의 바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시각은 다름.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 애리조나)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계획적인 노력이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음.
- 매케인 의원은 또 러시아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유럽 미사일방어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조지아민주공화국을 가입시키는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어서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한편,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 뉴저지)은 "미-러 관계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음.

사. 중·일 관계

- <日 사이키 차관,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해 방중>(7/29, 로이터)
 - 사이키 아키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계속된 영토갈등으로 악화된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양자 간 고위급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 지난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대외 강경론자인 아베는 해양 영토에 관한 중국측의 영유권 주장과 군비증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대화를 열망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금요일 일본과 중국 정상간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으며, 월요일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의하였음. 통신은 또 중국과의 대화를 위해 아베 총리가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치마 일본 내각 관방 참여는 일요일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음.



-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중국과) "상호이익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화를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요일 기자회견에서는 "양국간 정상회담에 대한 즉각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동중국해에 위치한 작은 섬들을 둘러싼 양국간 극한 대립은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내각 시절인 작년 9월 일본이 이곳의 무인도 중 일부를 국유화함에 따라 촉발되었고, 이후 중일관계는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여 왔음.
 - 작년 12월에 집권한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자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일본의 전쟁사를 재조명하기를 원하고 있어 관련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사이키 차관이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하고 양측간 관계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있다며 아베의 대화제의를 비꼬았음. 외교부는 또 일본은 "대화를 빙자해 내용없는 구호를 외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부인>(7/30,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문역인 이치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가 밝힌 중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부인했음.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30일 이치마 참여가 중국에서 정부 당국자로서 활동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 관원과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올린 글을 통해 "이치마 선생이 얼마 전에 중국비자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가 방중했다는 점을 시사하고서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정부 (당국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은 없었다. 중국 정부 관원이 그와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홍 대변인의 이 발언은 이치마 참여가 지난 13~16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과 접촉, 중일정상 회담 개최에 협조키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치마 참여는 지난 28일 나가노 현에서 행한 강연에서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사람들"과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한 뒤 "느낌상 머지않은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홍 대변인은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치마와 중국 정부 인사 간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정상회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음.
 -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도 30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음.



- 이 정부 관계자는 이지마가 중국 방문기간 중국 정부 인사를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이지마가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일본의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그의 중국 방문 주요 목적은 북한 방문을 협의하려는 것이며 중일간 정상 회동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 차이나 데일리는 홍레이 대변인이 일본에 "대화에 대한 속빈 구호만 내세우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일본은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말로만 대화 외치는 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8/2, 인민일보)
-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1일 일본의 중국 관련 발언을 놓고 현재 중일 관계의 심각한 국면은 일본 스스로가 자초한 일로 일본은 양국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말로만 대화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중국의 дя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주권 수호 입장은 변함없으며, 시종일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주장했고 또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음.
 - 지금의 문제는 일본이 말로는 대화를 외치지만 계속해서 도발적 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점으로 대화에 대한 성의가 조금도 없음. 일본은 한결같은 태도와 언행일치로 양국 대화에 필요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 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문제를 직시해야 함. 기본적인 외교 상식선에서 만약 고위층 대화가 개최된다면 먼저 양국 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데 일본 측은 줄곧 дя오위다오 문제를 회피하고 심지어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국과 진실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하지 않았음.
 - 일본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기반은 양국 간 4개 정치문건에서 정한 원칙임. 양측은 마땅히 이를 기반으로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내다보는' 정신에 입각해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의미와 정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최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나치헌법 관련 발언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상에서 아베 내각은 절대 나치 정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했지만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합동 군사훈련 본격 실시>(7/29,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 영토인 우랄산맥 인근 첼라빈스크주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음.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평화사명-2013'으로 명명된 양국 합동 훈련에 참가할 중국 인민해방군 선발대가 훈련지인 첼라빈스크주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중앙군관구 공보실이 밝혔다.
- 공보실은 "중국군 선발대가 러시아 중앙군관구 작전사령부 장교들과 함께 '체바르쿨 훈련장과 '샤골 항공기지' 등의 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보실은 중국군 본대는 다음달 1~2일 현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지난 2005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는 양국 합동 훈련에 올해는 중국 선양군관구 소속 군인들이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중국군은 밝혔다.
- 중국군은 수송기와 열차를 이용해 훈련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내몽골 자치구 하이라얼시(市)에서 70여명의 군인들이 수송용 헬기 '미(Mi)-171' 2대에 나눠타고 첼라빈스크로 출발했다. 전투용 헬기 'Z-9' 4대가 수송기를 엄호했다. 다른 110여명의 중국 군인들은 열차를 이용해 내몽골에서 첼라빈스크주로 떠났다.
-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양측에서 모두 1천500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전투 헬기와 전폭기, 장갑차, 야포 등이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훈련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에 대비한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간의 활발한 군사협력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취임 후 러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양국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임.
- 양국은 이달 5~11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포트르대제만에서 18척의 함정과 잠수함 등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 합동 해상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자. 기 타

● <아베 총리,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 정상회담 호소>(7/29, 아사히신문)

-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지난 27일 참의원선거 후 첫 외국순방을 마쳤다.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동남아시아 3개국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참의원 선거의 압승으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시화됐으나, 정작 중요한 중국, 한국과 직접대화 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27일, 마지막 방문지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 한 아베 총리는 "지구분을 조감하는 외교를 재개했다. 일본의 국익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전략적 외교를 추진해 가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음. 안정된 정권을 배경으로 침착한 외교를 목표로 함.
- 그가 강하게 의식하는 국가는 중국임. 동남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도 적지 않아, 동중국해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과 공통점이 있음. 일본정부 고위관료는 "중국이 시위행위를 하는 지금이야말로 아베 총리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필리핀 방문이 그 상징임. 필리핀은 스카보러 산호초(중국어명: 황옌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음. 아베 총리는 27일 마닐라에서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회담하고, 일본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로 순시선 10척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이는 해안경비를 강화하려는 필리핀의 요청에 응한 것임.
- 이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더불어 아베 총리가 작년 12월 취임한 이래 순방한 국가는 16개국에 이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맹국 10개 국가 중 7개 국가를 방문했음. 남은 것은 중국과 관계가 깊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인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중국과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외무상·정상 수준의 회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는 사무 수준의 대화마저 난항을 겪고 있음.
- 중국공선의 센카쿠 열도(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접근은 일상적인 일이 됐으며,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도 진행하고 있음. 일본외무성은 사이키 아키타카 사무차관의 중국방문을 조정하는 한편, 항의를 거듭하는 엇갈린 대응에 내몰리고 있음.
-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도 전망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임. 이달 초 가까스로 외교장관 회담이 실현됐으나, 역사인식 문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음. 한·중 양국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아베 총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음.
-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 전후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초점이 되고 있음. 정권 내에서는 "아베 총리는 대국적으로 판단한다"(측근)는 참배보류론이 있음.
- 한편, 26일에 회담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센카쿠 문제를 두고 "관련된 국가 모두가 긴장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음. 일본정부의 노력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아베 총리는 "우리는 항상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쳤음.

● <일본 아소 부총리 망언...'독일 나치식 개헌' 언급>(7/30, 연합뉴스)

-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9일 강연행사에서 독일 나치 정권



- 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우자는 취지의 망언을 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도쿄에서 행한 강연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나치 정권시절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음.
 - 개헌논의는 조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나치 정권을 거론한 대목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음.
 -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의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가 된 뒤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든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무력화됐음.
 - 아소 부총리는 "호헌을 외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개헌의 목적은 국가의 안정과 안녕이며, 개헌은 단순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음.
 - 그는 아베 신조 총리 및 각료들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8·15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아소 부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 제사 때 참배했고, 한국 정부가 그에 항의하는 의미로 당시 예정돼 있던 윤병세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한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된바 있음.
- <‘일본판 NSC’ 연내 조기 발족...‘아베 총리 지시’>(7/3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의 새로운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라 연내에 조기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음.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보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가능한 한 빨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테러나 영해침범 등의 사태를 총리 관저 중심으로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당초 내년 4월 발족 예정이었음.
 - 이를 위해 일본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임.
 - 이와 함께 연말에 마무리될 새 '방위계획 대강'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의 재수립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 신문은 전했다.
 - 연내 발족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기존의 '안전보장회의'를 개편, 정보수집 기능 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총리, 외무상, 방위상, 관방장관 등



4명이 월 2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전략 등을 결정하게 됨.

-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 관방 산하에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 정보수집·분석과 정부부처간 조정 등을 담당함.
- 국가안전보장국은 아시아와 러시아를 담당하는 정세분석 부문과 기능·테마별로 정보집약과 정책입안을 하는 전략, 정보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처음에는 50명의 인력으로 시작, 최종적으로는 100명 체제를 유지할 방침임.
-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시절인 2007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조기 퇴진하는 바람에 무산됐음.
- 지난해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알제리 일본인 인질 사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갈등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다시 추진했음.

● <“美공군, 호주 북부에 전투·폭격기 배치”>(8/1, 연합뉴스)

- 미국 공군이 내년 중 호주 북부에 F-22 랩터와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스, B-2 스텔스 폭격기 등 최신 전투·폭격기를 대거 배치할 계획이라고 호주 국영 ABC 방송이 1일 보도했음.
- 방송은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를 인용, 이 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방공망을 크게 확대하고자 하는 미군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 FP에 따르면 허버트 칼리슬 미국 공군 태평양 작전사령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호주의 다윈 기지에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보낼 예정이며 아마 폭격기도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칼리슬 사령관은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일단 다윈에 있는 호주공군(RAAF) 기지에 배치됐다가 이후 다윈 남쪽 300km 지점에 있는 캐서린 인근의 틸달 RAAF 기지에 재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칼리슬 사령관은 그러나 신규로 배치될 항공기들을 위한 새로운 공군 기지나 시설을 건설하지는 않고 기존 설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호주 다윈 기지에는 현재 250명의 미 해병대가 파견돼 있는데 미군은 전투·폭격기 추가 배치와 더불어 해병대 병력을 수년 내에 2천500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임.
- 미국 공군은 또 호주뿐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지에도 전투·폭격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 <아베, 헌법책임자 집단적자위권 찬성파로 교체 방침>(8/2, 연합뉴스)

-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려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담당부서 수장을 자신과 생각이 같은 현직 외교관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2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아마모토 쓰네키 현 장관에서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방침을 굳혔음. 이 인사안은 이르면 8일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음.
-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킴.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중대한 문제임.
- 내각 법제국의 현 아마모토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자위권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기존 해석을 견지하는 입장인 반면 고마쓰 대사는 헌법해석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임.
- 따라서 이번 인사가 이뤄지면 결국 민감한 집단적자위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코드 인사'로 평가될 전망이다.
-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대사는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은 바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법제국 근무 경력은 없음.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이끈 뒤 집단적자위권 해석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지난달 30일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가을 임시국회 답변을 통해 자위권 행사 용인을 표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